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30284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변○○
피 고 ○○군수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가 202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064,780원, 지방교육세 19,638,380원, 농어촌특별세 9,819,190원 합계 244,522,3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2. ○○ ○○군 B를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골프장), 종합 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중전사업자'라 한다)는 2019. 6. 13. 골프장업 및 휴양콘도미니 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9. 18. 골프장 등의 조성목적으로 ○○ ○ ○군 D 외 93필지 1,833,60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E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회사 설립 후 2020. 6. 29. 중전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면서 2020. 9. 9.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세 885,631,600원, 지방교육세 88,563,160원, 농어촌특별세 44,281,580원 합계 1,018,47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하 게 신고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215,064,780원, 지방교육세 19,638,380원, 농어촌특별세 9,819,190원 합계 244,522,3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부과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그 후 ○○ ○○군 F 외 7필지 10,71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 세 20,794,680원, 지방교육세 2,079,460원, 농어촌특별세 1,039,730원 합계 23,913,870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 등 건축 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2,575,539,070원, 지방교육세 147,173,640원, 농어촌특별세 184,137,410원 합계 2,906,850,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4. 3. 8.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중 감면되는 부분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14.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5. 4. 23. 이 사건 건축물 전부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골프장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90일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아. 피고는 2025. 5. 9.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증액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경정 결정분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불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증액부과분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75% 감면됨에 따라 잔존하는 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증액부과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 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실시한 증거에 갑 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 7. 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종전사업자는 이 사건 사업의 영위를 위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을 위한 과정만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중소기업으로 설립된 후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사업인 전문휴양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종전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사업은 '골프장·레저관련업 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업'이고,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골프장업'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및 사업권을 인수한 후 종전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3배 이상 증액하여 골프장을 완성한 후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종전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1토지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신고에 관한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며 다룰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증액부과분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설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2021. 6. 30.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244,522,350원 증액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②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1,018,476,340원이고, 그중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피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75%를 감면하여 잔존하고 있는 세액은 254,619,085원¹⁾인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신고 및 이 사건 증액부과분으로 결정된 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으로서 당초 신고한 세액의 잔존 범위 내에 있는 244,522,3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1) 254,619,085원[= 1,018,476,340원 - (1,018,476,340원 × 7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1

판사 정○○

판사 최○○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7. 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끝.